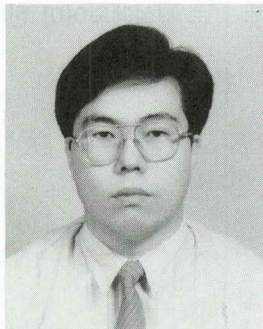


##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실태

### 1. 서론

IMF 관리체계가 시작된 이후 우리사회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7년 11월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에는 6.8%(146만명)로 높아졌고, 금년 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7%(179만명)를 기록하였다.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세계은행(IBRD) 추정에 따르면, 1998년의 빈곤율은 1997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 및 빈곤은 각종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였다. 즉, 이혼, 아동·노인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가정해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현상학적인 지표들의 미시적 내면실태가 바로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金美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는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실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실업 및 빈곤대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 2.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실태

### 가. 소득·소비실태

#### 1) 취업자 유무별 소득·소비수준

19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전체 실업가구의 월평균소득은 67.2만원, 월평균소비는 77.7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10.5만원의 적자상태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원 중 취업자 유무별로 나누어 보면,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의 소득은 33.3만원, 있는 가구는 88.8만원이며, 소비의 경우 각각 73.6만원과 80.6만원이다. 동 조사시점과 동일한 1998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7.2만원, 월평균소비는 123.5만원이므로 실업가구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32.4%, 소비는 62.9%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취업자 유무별 소득·소비수준(1998년 9월 현재)  
(단위: 만원)

구분	실업가구 <sup>1)</sup>			도시근로자 가구 <sup>2)</sup>
	평균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	
소 득	67.2	33.3	88.8	207.2
소 비	77.7	73.6	80.6	123.5

주: 1) 실업자가 있는 가구

2) 도시가계연보(1998년 3/4분기)상의 근로자가구 소비지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 2) 가구유형별 소득·소비수준

경제위기의 고통은 장애인가구, 편부모가구 등의 취약가구가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

19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전체 실업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32.4%인 67.2만원, 월평균소비는 62.9%인 77.7만원으로 나타났다.

들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실업가구의 월평균소득은 67.2만원인데 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실업가구는 94.9%수준인 63.8만원, 편부모인 실업가구는 66.0%수준인 44.2만원, 만성질환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80.7%수준인 54.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 수준에 있어서는 실업가구의 월평균지출이 77.7만원인데 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실업가구는 91.9%수준인 71.4만원, 편부모 실업가구는 66.7%수준인 51.8만원, 만성질환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93.8%수준인 72.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구특성별 소득·소비수준(1998년 9월 현재)

(단위: 만원, %)

구분	실업가구	노인가구 <sup>1)</sup>	장애인가구	편부모가구	만성질환가구
소득	67.2 (100.0)	66.7 (99.3)	63.8 (94.9)	44.2 (66.0)	54.2 (80.7)
소비	77.7 (100.0)	73.3 (94.3)	71.4 (91.9)	51.8 (66.7)	72.9 (93.8)

주: 1)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 3) 가구규모별 소득·소비수준

가구규모별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가계수지를 분석하면 가구규모별로 어떤 가구에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가구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가 1.47명(도시가계연보 1998년 3/4분기)이므로 실업가구의 경우 가구규모가 적은 가구가 더욱 어려움을 당할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조사결과에서도 1인부터 5인까지의 가구규모에서는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인 반면에 6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적자폭은 가구규모가 적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 4) 실업기간별 소득·소비 수준

실업기간별로 가계수지를 분석하면 어느 시점에서 가계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가구규모별 소득·소비수준(1998년 9월 현재)

(단위: 만원)

구 분	소 득	지 출	가계수지	1인당 가계수지
평 균	67.2	77.7	-10.5	-
1인가구	19.9	34.0	-14.1	-14.1
2인가구	42.6	66.4	-23.8	-11.9
3인가구	61.9	75.6	-13.7	-4.6
4인가구	73.1	84.4	-11.3	-2.8
5인가구	86.6	86.9	-0.3	-0.1
6인가구	93.5	86.1	+7.4	+1.2
7인가구	93.7	91.6	+2.1	+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표 4. 실업기간별 소득·소비수준(1998년 9월 현재)

(단위: 만원)

실업기간	소 득	지 출	가계수지
1개월	115.4	81.3	34.1
2개월	71.1	71.5	-0.4
3개월	67.7	91.0	-23.3
4~ 6개월	55.8	76.4	-20.6
7~ 9개월	60.1	70.1	-10.0
10~12개월	62.6	74.1	-11.5
1년 이상	57.2	81.2	-2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실업기간별 실업가구의 소득은 실직기간<sup>1)</sup>이 늘어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지출은 실직기간에 따른 일정한 추세를 발견할 수 없다. 소득의 감소 경향은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변동의 경향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실업으로 인한 장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현재의 소비상태가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가구규모별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가계수지를 분석하면 1인부터 5인까지의 가구규모에서는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인 반면에 6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1) 가구내 실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최근에 실직한 실업자를 기준으로 실직기간을 구하였음.

해석된다. 이는 현재의 소비수준이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직기간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이와 같은 변화를 보임에 따라 실직기간 1개월인 경우 흑자, 2개월인 경우 균형(엄밀한 의미에서 적자)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3개월부터는 적자상태로 전환되고 있다.

### 5)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및 이웃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실업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가까운 가족 및 친지간에 주고받는 사적인 이전소득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소득보장의 기능을 담당한다.

실업전 이전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89가구로서 전체 2,771가구의 3.2%를 차지하며, 가구당 이전소득은 평균 23만원이었다. 실업 이후 이전소득이 발생한 가구는 358가구(12.9%)로서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 혹은 소멸이 이전소득의 증대를 촉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소득 규모도 가구당 월평균 31만원으로 높아져 이전소득이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모나 친지를 도와주는 이전지출은 실업후 비율이나 금액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실업가구의 실업전후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1998년 9월 현재)

(단위: 가구, %, 만원)

이전소득				이전지출			
실업전		실업후		실업전		실업후	
가구수	월평균	가구수	월평균	가구수	월평균	가구수	월평균
89(3.2)	23	358(12.9)	31	131(4.7)	18	81(2.9)	17

주: ( )은 전체 가구수(2,771가구)에 대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 6) 적자가구 비율

실업은 소득원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가구소득은 일시에 급격히 감소하는 데 비해 가구소비는 소비의 하방경직성으로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실업가구 중 많은 가구가 적자가구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의 비율이 비실업가구의 경우 33.5%인데 비해 실업가구는 53.0%로 나타났다.

이들 적자가구는 일차적으로 소비수준을 최저생계비까지 낮추어 가계수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 실업가구의 88.2%가 소비를 줄임).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활수준을 최저생존비 수준으로 낮추거나 빚을 얻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사결과 실업가구의 19.4%가 빚으로 생활유지).

표 6. 적자가구 비율(1998년 9월 현재)

(단위: %)

구분	실업가구			비실업가구 <sup>1)</sup>
	평균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	
혹자	41.7	23.7	53.3	60.5
균형	5.3	4.6	5.7	6.1
적자	53.0	71.7	41.0	33.5

주: 1) IMF 이후 전직자, 실망실업자, 순수 비경제활동자가 있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나. 소득계층별 분포

실업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생활안정 대상을 설정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소득분포를 기초로 실업가구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실업가구 중 가구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27%, 2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34%,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38%,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50%,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80%이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의 20%이다.

실업전 가구당  
 이전소득은 월평균  
 23만원이었으나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 혹은  
 소멸로 31만원으로  
 높아진 반면에, 부모나  
 친지를 도와주는  
 이전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실업가구의 소득분포(1998년 9월 현재)

소 득	누적분포(%)	소 득	누적분포(%)
없 음	27	70만원 이하	63
10만원 이하	30	80만원 이하	69
20만원 이하	34	90만원 이하	72
30만원 이하	38	100만원 이하	80
40만원 이하	42	150만원 이하	91
50만원 이하	50	200만원 이하	96
60만원 이하	57	200만원 이상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비율

실업가구 중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 작업이다. 실업가구의 재산소득, 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공공부조 외의 사회보장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가구는 일반적으로 빈곤가구로 정의된다.

조사결과 실업가구들의 61.0%가 빈곤선<sup>2)</sup>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가구의 빈곤gap은 44.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빈곤gap의 의미는 미시적으로 빈곤가구에게 보충급여를 할 경우 가구당 평균 44.2만원의 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시적으로는 생활보호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소득이 실업가구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

표 8. 실업가구중 빈곤가구 비율(1998년 9월 현재)

(단위: %, 가구)

구분	객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실업가구	비실업가구	실업가구	비실업가구
비빈곤	39.0	66.5	41.3	62.0
빈 곤	61.0	33.5	58.7	38.0
계	100.0(2,538)	100.0(1,417)	100.0(2,742)	100.0(1,4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와 도시가계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아래 추정된 최저생계비임.

지 못하는 주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58.7%로 객관적 빈곤율 61.0%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곤율은 실직기간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직기간이 1개월인 경우 빈곤율은 36.5%이나 2개월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54.4%에 이르고 3개월부터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9. 실직기간별 빈곤가구율 추이(1998년 9월 현재)

(단위: %)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년 이상
빈곤	36.5	54.4	60.3	66.7	66.4	66.3	65.2
비빈곤	63.5	45.6	39.7	33.3	33.6	33.7	3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라. 재산 및 부채

재산 중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은 소득원을 상실한 실업가구의 경우 유용한 가용재원이 된다. 즉, 최악의 경우 필수재산을 제외한 가구재산을 처분하여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가구는 순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37.2%, 3000만원 미만인 55.9%, 5000만원 미만인 71.5%이며, 5000만원 이상이 28.5%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2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4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비율은 약 55.0%,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비율은 약 66.8%로 추정된다.

실업가구의 저축액은 평균 556.4만원, 부채액은 1467.1만원이고, 비실업가구의 경우 저축액이 평균 682.8만원, 부채액이 1997.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저축과 부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실업가구의 경우 44.7%는 부채가 많은 가구, 23.2%는 저축이 많은 가구로 나타났다.

실업가구의 순재산 분포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비율은 약 55.0%,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비율은 약 66.8%로 추정된다.



표 10. 실업가구의 순 재산분포(1998년 9월 현재)

소득	누적분포(%)	소득	누적분포(%)
1000만원 미만	37.2	2~3억원	98.8
1000~3000만원	55.9	3~4억원	99.5
3000~5000만원	71.5	4~5억원	99.6
5000~7500만원	81.7	5~7억원	99.9
7500~1억원	88.3	7~10억원	99.9
1~1.5억원	94.3	10~20억원	100.0
1.5~2억원	96.7	20억원 이상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마. 실업에 대한 대응형태

1) 타가구원의 대응

가구원의 실직은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이 어느 나라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이후 다른 가구원의 구직활동 개시비율이 조사결과 비실업가구의 경우 23.0%인데 비하여 실업가구는 51.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른 가구원들이 새로 취업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실업가구가 7.6%, 비실업가구가 10.8%로 조사되었다.

표 11. 실직·이직에 따른 가구원의 대처방안(1998년 9월 현재)<sup>1)</sup>

(단위: %)

구분	실업가구	비실업가구 <sup>2)</sup>
다른 가구원의 취업	7.6	10.8
취업가구원의 부업	4.2	6.9
취업가구원의 직장이동	0.5	9.4
취업가구원의 연장근무	8.4	8.7
가구원의 구직활동 개시	51.9	23.0

주: 1) 중복응답결과임.

2) IMF 이후 전직자, 실망실업자, 순수 비경제활동자가 있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2) 생계유지 수단 및 생계유지 가능기간

소득원을 상실한 실업가구의 경우 지출을 줄이는 한편 다른 가용재원으로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가용재원이 없는 경우 지출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줄여도 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54.5%), 그 동안의 저축(33.7%), 빚을 얻어서(19.6%)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실업가구의 경우도 근로소득(85.4%), 그 동안의 저축(26.2%), 빚을 얻어서(16.8%)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빚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이다. 실업가구의 경우 실업대부를 받은 가구가 2.3%, 순수 빚을 얻어서 생활하는 가구가 19.6%로 조사되어 부채로 생활하는 가구 비율이 약 20%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는 취업되지 않을 경우 부채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금융불량거래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원의 근로  
소득(54.5%), 그 동안의  
저축(33.7%), 빚을  
얻어서(19.6%)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생계유지 수단(1998년 9월 현재)<sup>1)</sup>  
(단위: %)

구분	실업가구	비실업가구 <sup>2)</sup>
가구원의 근로소득	54.5	85.4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10.7	5.7
친척 또는 친지의 지원	11.2	7.3
그 동안의 저축	33.7	26.2
재산소득	3.8	4.8
부동산을 줄이거나 매각	2.4	2.7
빚을 얻어서	19.6	16.8
종교단체(사회단체)의 도움	1.2	0.9
이웃의 도움	1.6	1.1
실업급여	7.4	0.8
공공근로사업	6.7	5.8
정부의 대부사업	2.3	0.7
생활보호	2.3	1.9
직업훈련수당	4.2	0.2
농업소득	5.1	5.6
기타	3.6	0.8

주: 1) 중복응답결과임.

2) IMF 이후 전직자, 실망실업자, 순수 비경제활동자가 있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한편, 현재와 같은 미취업 상태가 계속될 때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미만(14.8%), 1~3개월(20.1%), 3~6개월(13.5%)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가구내 취업자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가 있는 가구보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자 없는 경우 46.5%, 있는 경우 26.8%).

### 3. 경제생활실태가 시사하는 정책함의

#### 가. 실업대책의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실태 분석에서 실업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구는 동일한 실업가구일지라도 첫째, 가구내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 둘째, 가구내 취약자가 있는 실업가구, 셋째, 가구규모가 적은 실업가구, 넷째, 실업기간이 긴 가구이다. 물론 이러한 요건들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현행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실직자대부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실업급여 등의 실업대책에서는 이들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여야 하며, 중복 요건을 지닌 가구에게는 선정에서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급여에 있어서도 이들 가구의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들 가구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총근로일수의 조정, 공공부조의 부가급여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생활보호제도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아 왔다. 특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는 점은 현실적인 형평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이나, 보유재산이 재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대로 재산이 재산기준 이하이고 소득이 소득기준을 겨우 초과한 경우 생활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실태조사 결과 소득기준은 만족하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sup>3)</sup> 가구비율이 약 18.6%이고, 재산기준은 만족하나

3) 1998년 재산기준은 2900만원이나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가구비율이 20.4%이다. 이 결과는 자산소유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표 13. 소득 및 재산수준별 빈곤여부(1998년 9월 현재)  
(단위: %)

구 분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최저생계비 이하	22.7	9.6	7.3	11.3
최저생계비 이상	12.3	8.1	9.3	1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정방식 자체를 개선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최저거주기준을 월비용으로 환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재산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므로 자산기준은 최저생계비 하나만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산조사시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자산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대상자 책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사회안전망 대상계층 추정가능

실업가구의 소득분포에서 20만원 이하인 가구(34%)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추정치 26.1만원(1998)보다 낮으므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 실업가구에겐 생활안정사업(생활보호, 실업대부 등)이 필수적이다. 한편, 실업가구의 20% 정도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대부분은 7인가구 최저생계비 추정치 102.8만원(1998)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업가구의 상위 20%는 고용정책 대상(target population)은 될지라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생활안정사업 대상이 아님이 확실하다. 

실업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구는 동일한 실업가구일지라도 가구내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 가구내 취약자가 있는 실업가구, 가구규모가 적은 실업가구, 실업기간이 긴 가구이다.